

동물자유연대 4.7 재·보궐선거 동물복지 정책제안서

1. 정책제안 주요내용

구분		제안내용
위기동물 1)	위기동물 발생예방	○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교육 조례 제정
	동물학대 및 유기 대응 체계정비	○ 동물보호 특사경 지정 ○ 위기동물 발생시 대응 지침 마련 ○ 동물학대 사건 대응 공조체계 구축
	위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 위기동물 응급처치 및 고통경감 의무화 ○ 재해·재난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위기동물대응센터 설립	○ 위기동물 발생 예방으로부터 보호,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정비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장 점검 강화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과정 운영 ○ 중성화사업 등 도심 녹지 들개 대책 마련
	의료접근성 강화	○ 동물보건소 설립/운영
	개식용 종식	○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업체 조사
농장동물	탈육식	○ 채식문화 장려 ○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
	동물복지축산 전환	○ 공공기관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구매
전시동물	공영 동물원 공공성 강화	○ 전시 부적합 종의 단계적 전시 중단 ○ 도심 생츄어리 운영 ○ 생태교육 기능 강화
실험동물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 관내 교육기관에서의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경계동물	위해시설 정비	○ 도심 야생동물 위해시설 조사 및 정비

1) 생명체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위험이 실현된 상태의 동물을 의미(예 : 유기·유실동물, 피학대동물, 재해·재난 상황에 놓여 있는 동물 등)

2. 정책제안 세부 내용

구분	제안내용
위기동물 발생예방	<p>○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교육 조례 제정</p> <p>(제안 이유) 아동 청소년의 발달기 교육은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매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따라서 동물과의 공존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제공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동물보호교육에 대한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동물보호교육이 정규교육과정 속에서 자리 잡고, 확산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진흥법'의 제정을 제안함.</p>
위기 동물	<p>○ 동물보호 특사경 지정</p> <p>(제안 이유)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비한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 부족 등으로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 증가하는 동물 관련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서울/부산시는 미지정. 동물 관련 사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보호 특사경 지정이 이루어져야 함.</p>
동물학대 및 유기 대응 체계정비	<p>○ 위기동물 발생시 대응 지침 마련</p> <p>(제안 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지자체장이 동물의 소유자 등에 관리실태 등 자료를 요구하거나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제39조) 및 피학대 동물의 격리조치(제14조) 등의 권한 부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사례들이 발생. 위기동물 발생시 동물의 안전과 보호를 우선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시달할 필요가 있음.</p> <p>○ 동물학대 사건 대응 공조체계 구축</p> <p>(제안 이유) 아동학대와 동물학대는 학대대상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어렵고, 학대대상의 보호문제 등 여러 공통점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체계에 있어서는 큰 차이 존재. 아동학대의 경우 '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 별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 동물학대 사건도 각각의 권한과 전문성이 상이하므로 출입·검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수사기관, 동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단체 및 수의사 등과의 협력체계,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됨.</p>

	<p>위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p>	<p>○ 위기동물 응급처치 및 고통경감 의무화 (제안 이유)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동물은 질병 또는 사고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처치나 고통경감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높은 자연사 비율로 이어짐. 서울의 경우 2016-2020년 발생한 유실·유기 38,080건 중 7,243건(19.0%)이 자연사했으며, 이 비율은 2016년 17.0%에서 2020년 22.0%로 증가 추세. 부산의 경우 2016-2020년 발생한 유실·유기 37,205건 중 22,773건이 자연사해 무려 61.2%에 달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치 기록 따라서 질병 혹은 상해를 입은 개체가 입소시 방치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응급조치나 고통경감 조치 등을 의무화 해야 함</p> <p>○ 재해·재난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제안 이유) 우리나라는 재해·재난시 동물의 안전대책 부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단계로 체계와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 그러나 동물의 안전은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해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재해·재난시 요구되는 동물보호의 내용과 수요에 대한 조사 △동반 대피소 및 임시보호 시설 지정 또는 임시보호시설 전개를 위한 물자 확보 등 인프라 구축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함.</p>
	<p>위기동물대응센터 설립</p>	<p>○ 위기동물 발생 예방으로부터 보호,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설립 (제안 이유) 앞에서 요구한 위기동물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에 있어 분산된 자원을 한 곳으로 모으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체 필요하며, 위기동물대응센터(가칭) 설립을 제안</p>
<p>반려동물</p>	<p>생산판매업 정비</p>	<p>○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장 점검 강화 (제안 이유) 2016년 '강아지공장'사건 이후 반려동물 생산·판매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영업자 준수사항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영업장이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지자체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음.</p>
	<p>건강한 반려문화 조성</p>	<p>○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과정 운영 동물학대 및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과정부터 정비해야 함.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24.3%는 사육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됨.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과 비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 경우 제대로 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사육포기 또는 유기로 이어질 개연</p>

	<p>성이 높음. 독일의 니더작센주의 경우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입양 전 이론시험과 입양 후 실습 시험을 치르고 이를 통과해야 하며, 스위스 역시 반려견 입양 전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최소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 중성화사업 등 도심 녹지 들개 대책 마련 (제안 이유) 2016-2020년 유실·유기동물 발생현황을 보면 어린 개체의 비중이 높고, 비품종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관리소홀로 인해 증식 또는 유실 되거나 유실된 개체가 야생화되어 번식하는 개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정부와 지자체의 동물보호예산 중 대부분이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에 집중되다 는 점을 고려하면 유실·유기 억제 차원에서 마당개의 과도한 증식을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중성화에 대한 홍보 및 지원이 요구됨.</p>
<p>의료접근성 강화</p>	<p>○ 동물보건소 설립/운영 (제안 이유)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반려동물 양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투영됨. 사람 못지 않은 생활과 환경을 누리는 반려동물도 있지만 질병 및 상해가 발생해도 최소한의 의료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부재한 현상환은 동물복지에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 또 취약계층의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 및 상해가 반려인의 복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동물과 인간의 모두를 위해 기본적인 의료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함. 이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보건소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함</p>
<p>개식용 종식</p>	<p>○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업체 조사 (제안 이유) 개농장은 동물복지와 권리가 유린되는 대표적인 시설이지만 법의 사각지대 속에 유지. 그 존립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 중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임. 대부분의 개농장은 음식물 쓰레기를 급이함으로써 처리비용을 챙기는 동시에 사료값을 절감. 하지만 분뇨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농장이 대부분으로 오히려 더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 서울,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중 상당량은 개농장으로 유입되어 동물복지 저하 및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련 업체에 대한 점검 및 부적절 업체에대한 제재가 필요함.</p>
<p>농장 동물</p>	<p>○ 채식문화 장려</p> <p>○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 (제안이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미국, 영국, 독일 베지테리언 식품 시장현황 및 수출확대 방안'(2017) 보고서를 보면 미</p>

국 성인 인구 2억 4,500만 명 중 3.3%인 약 8백만 명이 채식 인구로 집계되며, 독일은 전체인구의 10%에 가까운 780만 명, 영국은 성인인구의 약 2.6%인 137만 명에 이르렀으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국내의 채식인구에 대한 통계조사는 없지만 인사이트코리아에서 분석한 소셜미디어 '채식주의'에 대한 언급량은 2015년 7047건에서 2019년 2만9914건으로 급증,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추정 가능. 하지만 채식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식당은 물론 관공서에서 제공하는 급식에서조차 채식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임. 반면 포르투갈 의회는 2017년 3월 3일 "매점 및 공공 급식에서 채식 선택권 보장 의무"에 관한 법률의 제정, 채식 선택권을 입법화. 로스앤젤레스 시 등은 시 차원에서 주 1회 채식운동에 동참. 채식은 동물의 고통뿐 아니라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장려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최소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동물복지축산 전환

○ 공공기관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구매
(제안 이유) 절대 다수의 농장동물들은 출생, 사육, 도축 과정에서 자유를 속박 당하거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에 노출되고 있음. 공장식축산으로 인한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복지인증 제도를 도입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2017년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시민의 85%는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 향상이 필요하다고 응답. 하지만 정작 소규모 동물복지농장의 경우 판로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서울, 부산은 농장동물의 생산지는 아니지만 최대 수요처라는 점을 고려하면 농장동물의 고통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농장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부터라도 가능한 동물복지 축산물을 사용하도록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구매'를 시행할 것을 요구함.

전시 동물 공영 동물원 공공성 강화

○ 전시 부적합 종의 단계적 전시 중단
(제안 이유)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에서는 코끼리와 영장류, 북극곰 등을 전시 부적합 종으로 분류. 이들은 사육장 면적이 야생에 비해 지나치게 좁거나 지능이 높아 전시시설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 큰 고통을 초래. 전시 부적합종은 다른 종에 비해 전시시설에서의 생활에 대한 고통이 큰 만큼 추가개체 반입 중단 등 단계적으로 전시를 중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심 생츠퍼리 운영
(제안 이유) 체험동물원 및 야생동물카페 등의 폐업 뒤 야생으

	<p>로의 복귀가 불가능한 전시동물, 위법하게 거래된 몰수 야생동물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국내적 인프라가 태부족한 실정임. 이에 위기의 야생동물 혹은 몰수 대상 동물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공영동물의 일부공간을 도심형 생츠퍼리로 활용하도록 함.</p> <p>○ 생태교육 기능 강화 (제안 이유) 동물원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 중 하나로 교육기능을 내세움. 그러나 우리에게 갇힌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본래 생태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어려움. 따라서 동물전시에 따른 동물복지의 한계점, 해당 동물들의 본래 생태적 모습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p>
<p>실험 동물</p> <p>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p>	<p>○ 관내 교육기관에서의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제안 이유)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조항이 시행되었으나 광범위한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취지를 잃게 됨. 해외에서도 학교 해부실험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이고, 국내에서도 학교 해부실험 강행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바도 많은 바, 미성년자의 경우 학교에서든 사설학원에서든 해부실험의 예외 없는 전면 금지로 나아가야 함. 아울러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동물을 희생시키는 동물 해부실험 대신 대체 교구나 현장 참관 실험 등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윤리적 문제없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p>
<p>경계 동물</p> <p>위해시설 정비</p>	<p>○ 도심 야생동물 위해시설 조사 및 정비 (제안 이유) 길고양이, 비둘기 등 도심 속 혹은 사람의 생활영역에 인접해 살아가는 동물의 경우 인간이 만들거나 조성해 놓은 시설물이나 환경에 의해 위험에 처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 로드킬이 대표적인 예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동물 찾길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을 제정, 2018년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아직 로드킬 저감 대책에 대한 실효성은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은 연간 2만 마리 정도로 추산. 투명유리창과 투명방음벽으로 인한 조류충돌로 목숨을 잃는 동물도 하루 2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 이에 조류충돌 저감 대책 마련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건축물과 각종 시설에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 필요</p>

3. 정책제안 답변서

구분		제안내용	채택	거부	보류	보류사유
위기동물	위기동물 발생예방	○ 아동·청소년 대상 동물보호교육 정착을 위한 동물보호 교육 조례 제정				
	동물학대 및 유기 대응 체계정비	○ 동물보호 특사경 지정				
		○ 위기동물 발생시 대응 지침 마련				
		○ 동물학대 사건 대응 공조체계 구축				
	위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및 인프라 구축	○ 위기동물 응급처치 및 고통경감 의무화 ○ 재해·재난시 동물보호 대책 마련				
위기동물대응센터 설립	○ 위기동물 발생 예방으로부터 보호, 종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관 설립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정비	○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장 점검 강화				
	건강한 반려문화 조성	○ 반려동물 양육 전 사전교육 과정 운영				
		○ 중성화사업 등 도심 녹지 들개 대책 마련				
	의료접근성 강화	○ 동물보건소 설립/운영				
개식용 종식	○ 음식물 쓰레기 배출/수거업체 조사					

농장 동물	탈육식	○ 채식문화 장려				
		○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				
	동물복지축산 전환	○ 공공기관 동물복지 축산물 우선 구매				
전시 동물	공영 동물원 공공성 강화	○ 전시 부적합 종의 단계적 전시 중단				
		○ 도심 생츄어리 운영				
		○ 생태교육 기능 강화				
실험 동물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 관내 교육기관에서의 미성년자 해부실험 금지				
경계 동물	위해시설 정비	○ 도심 야생동물 위해시설 조사 및 정비				